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 소득항목별 영향력과 시계열적 변화*

On the Measurement of Regional Bi-polarization in Korea

김성제**·최상희***

이 연구는 선행연구를 통한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분석방법론 연구를 토대로 하여 총소득을 기준으로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각각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으며,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계열적으로는 어떠한 추세를 나타내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해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의 시계열적 변화 및 소득항목별 영향력을 파악하고자 한다. 연구의 분석 자료는 한국노동연구원의 1차년(1998년)부터 9차년(2006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조사된 노동패널 자료를 사용했으며, 연구방법으로 Wolfson지수의 산출을 통해 지역별 양극화와 자산소득의 추세 및 소득항목별 영향력을 파악했다. 분석결과 도 단위의 양극화 수준과 추세는 전국의 그것들과는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냈으며, 자산소득 중에서도 부동산소득이 대체로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과는 다르게 금융소득은 지역별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요어: 지역별 양극화, Wolfson지수,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 이 글은 2008년도 한국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을 수정 보완한 것임.

** 서울대학교 환경대학원 박사수료, 세종사이버대 강사(ksj7@snu.ac.kr)

*** 서울대학교 건축학과 박사, 성균관대학교 건축학과 겸임교수

1. 서론

우리나라는 ‘불균형 성장전략’을 통해 경제가 급격히 성장한 대표적인 국가다. 보통 ‘서민’들의 입장에서는 국가가 고도성장을 구가하는 동안 예상했던 또는 예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부작용들을 직접 체감하게 되는데, 그중에서도 소득의 불균형(격차), 지역 간 또는 지역 내 격차, 주거안정 및 주거복지 등과 관련된 문제들이 그러하다. 정치경제학적으로는 미국과 서유럽 국가를 중심으로 규제 완화, 사유화, 개방화, 공공복지 부문 악화 등의 신자유주의 정책을 펴면서 사회계급 간 격차가 급격해진 것으로 파악된다(홍종옥, 2006).

신광영(2006)은 우리나라 사회양극화 현상의 중요한 특징을 피고용자 내 임금소득의 양극화와 함께 부동산과 금융자산으로 구성되는 자산소득의 양극화를 포함하는 복합적인 사회현상으로 파악한다. 임금소득의 양극화는 주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격차의 확대와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 격차 확대와 같은 노동시장의 양극화에 따른 결과로 해석하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저임금으로 인한 노동빈곤층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임금소득의 양극화가 가속화되고, 부동산 소득은 토지·주택 소유자와 비소유자 간 격차에 의해 양극화 심화현상이 표출된다는 것이다. 한편 류상영·최인철(1999)은 자산소득 증가, 금융 및 실물변수의 변동성 확대,¹⁾ 산업구조 개편²⁾을 소득양극화의 원인으로 꼽는다.

격차(Disparity) 또는 양극화(Bi-Polarization) 문제는 공간구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산업구조의 재편과정에서 도시 내 제조업이 쇠퇴하고 정보통신, 금융서비스, 연구분야 등 지식기반형 산업이 주도하면서, 고소득계

1) 외환위기를 전후해 금융 및 실물변수의 변동성이 급증함에 따라 자산 가격의 변화에 따른 소득격차가 크게 확대됨.

2) 정보통신 및 IT 산업과 같은 신경제 산업에 속한 근로자와 그렇지 못한 근로자 간의 소득격차 확대. 산업 간 임금격차뿐 아니라 외환위기 이후부터는 전문가 집단과 단순 노동자 집단 간의 임금격차도 확대.

층과 저소득계층(소매, 음식, 청소, 경비 등)으로 대비되는 현상이 나타난다. 저소득층·빈곤계층의 주거환경이 열악해지고, 상대적으로 강남 등 일부 지역 부동산 가격 상승 및 자산 편중 현상이 공간문제와 연계되는 경우, 양극화 문제는 더욱 심각하게 나타난다. 왜냐하면 계층 간 양극화 현상이 공간적으로 투영되어 사회혼합(Social mix)을 저해하고 갈등을 부각시키면서, 이른바 사회적 배제(Social exclusion)를 유인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구조적 이중성은 고소득층과 저소득층의 주거, 소비, 여가창출의 공간이 분리되는 ‘이중적인 공간구조’를 동반하게 된다(Castells, 1989). 나아가 미국 대도시권(New York State)에서 동일 또는 유사 직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Between Up-state and Down-state)로 임금격차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나, 이중적 공간구조에 의해 근로소득의 격차가 확대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Kim, 2006; 김성제, 2007). 이러한 공간불균형은 계층 양극화의 결과이기도 하지만 공간적 불균형이 다시 계층 양극화를 더욱 고착시키는 순환적 측면도 있다. 우리나라에서 소득측면의 양극화 추세는 1984년부터 외환위기 이전까지 높은 경제성장률과 실질 임금의 상승세 덕분에 개선되는 모습을 나타낸다(민승규 외, 2006). 그러나 2000년대 이후부터 최근까지 양극화가 오히려 심화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실증연구가 증가하고 있다(권일·류상규, 2005; 성현곤·김혜자, 2006; 민승규 외, 2006; 봉인식, 2006; 한국은행, 2006 등).

이 연구에서는 총소득을 중심으로 근로소득,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 등이 각각 양극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지역별로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시계열적으로는 어떠한 추세를 나타내는지 분석하고자 한다. 제II장에서는 양극화의 개념과 분석방법론과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고, 제III장에서는 분석방법과 연구범위를, 제IV장과 제V장에서는 분석결과를 제시하고 마지막 장에서 결론과 시사점을 도출하기로 한다.

2. 양극화와 양극화 지표

양극화에 대한 개념과 현상은 매우 다양하지만, 대체로 중간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으로 모이는 현상, 지니계수의 상승으로 표현되는 불균형의 심화, 소득 상·하위 집단 간 격차가 확대되는 것, 빈곤의 확대, 기업이나 산업 간·부문 간 격차가 확대되는 현상, 고용이나 소득의 격차 확대, 소득분배의 극화, 성장부문과 지체부문 간 (성장의) 격차가 벌어지거나 고착화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양극화 개념은 다양한 측면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 강신욱 등(2006)은
 ◦ 빈곤의 규모와 심각성이 증가했는가? ◦ 불균형은 심화되었는가? 또는 불균형의 양상은 변화했는가? ◦ 중산층은 축소되었는가? ◦ 극화(polarization)가 진행되었는가? ◦ 계층 간 이동가능성(mobility)은 축소되었는가? 등 다섯 가지로 분류해 정의한다. 특히 계층 간 이동가능성의 변화를 통해 양극화를 설명하고자 한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인 ‘소득중심의 양극화’ 논의에서 ‘주거중심의 양극화’ 논의로의 전환은 윤주현(2006)에 의해 이루어졌다. 주거양극화의 개념을 “주거서비스 수준과 주택자산의 격차 및 이의 확대”로 정의하면서 주거부문의 경우 중산층의 소멸보다는 최저계층의 주거수준과 주거비부담을 양극화 해소의 중요 과제로 파악했다. 이보다 앞서 윤주현(2005)의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1)」에서는 주거비 부담, 주거안정성, 주거형평성 지표 등의 분석을 통해 지역 간 소득수준별 주거서비스 격차에 대해 분석함으로써, 소득중심의 양극화 개념보다는 소득계층별 주택접유 형태, 주거서비스 격차의 심화 과정을 고찰한 바 있다.

한편 이재형(2004)은 계층별 주거 격차 확대에 따라 문제가 될 수 있는 계층을 중심으로 주거격차를 분석했는데, 중산층과 저소득층(1~4분위의 소득계층) 사이의 계층을 틈새계층(중산화 가능계층)으로 정의하고 중산화 가능계층의 주택수요 실태 분석을 통해 사회적 배제와 양극화가 발생할 수 있는 구조적 문제점 지적했다. 또한 임석희·이용우(2002)는 서울시 각

구별 평균토지가격의 변화를 1999년과 2002년 두 시점의 비교분석을 통해 사회적 양극화의 공간적 표출과정을 규명하고자 했다. 비교결과, 외환이후 이후 공간적으로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중심의 고소득층 주거지와 나머지 구의 주거지로 양분되었으며, 사회적 양극화가 직업구조와 임금소득이라는 요인 이외에도, 부동산가격 및 소득, 생활 인프라의 격차를 통해 공간적 양극화를 야기하는 것으로 지적했다.

이와 같은 연구들은 소득분배, 주거서비스의 불균형 문제에서 더 나아가 사회계층 간 갈등, 지역 또는 집단 간 갈등양상의 확대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 결과, 기존의 불균형 측정지표를 개선한 분해된 지니계수와 극화를 측정할 수 있는 지표들을 개발해, 집단 내 및 집단 간 갈등양상에 대한 현황분석 지표 방법론에 대한 연구를 병행하고 있다. 이러한 지표 또는 지수에 근거해 사회의 갈등현상을 파악하고 설명하는 방법이 보다 쉽게,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연구방법들은 분석대상이 되는 자료들의 형태와 구조에 의해 많은 제약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사회갈등 현상의 분석을 위해서 주로 활용되는 자료는 통계청의 가계조사자료와, 한국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이 주로 이용된다. 조세연구원(2005)의 연구에서는 소득양극화 현상을 분석하기 위해 가계조사자료와 종합토지세·재산세 과세자료를 연계해 소득-주택자산 결합자료로 활용했다. 한국은행(2006)의 연구에서는 노동패널을(2차-7차) 이용해 전국, 경기, 서울지역을 중심으로 ER지수 및 Wolfson지수를 산출했으며, 근로소득을 중심으로 양극화가 전개된 것으로 분석했다. 또 2001년 이후 부동산소득(비근로소득)의 비중이 상승하면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했다. 민승규 외(2006)는 소득10분위별 도시근로자가구 소득을 기준으로 ER지수를 작성했고 ER지수와 원인변수 간 그랜저 인과관계분석을 통해 양극화 결정 모형을 구성했다. 이 연구에서 양극화 원인 변수에 대한 인과관계분석결과 주택가격 상승률은 소득양극화와 인과관계가 없는 것으로 분석했으며, 이는 근로자 가계소득에 미치는 주

택가격의 변화의 영향이 장기에 걸쳐 일어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권일·류상규(2005)는 인구자료를 이용해 지역별 지니계수를 산출, 인구의 공간적 불균형 현상을 파악하고 있으나, 단편적인 지니계수 산출과, 불균형을 가져온 요인에 대한 설명은 없다. 김의준·정윤희(Kim & Jeong, 2003)와 김의준(2003)은 대우패널을 이용, 1995년의 우리나라 소득격차를 지역 내 격차와 지역 간 격차로 분해한 후, 소득원천별로 소득불균형의 요인을 분석해, 우리나라 소득격차의 요인이 주로 지역 간 격차에서 비롯된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또 수도권과의 격차가 가장 크다는 점, 근로소득과는 다르게 자산소득과 공적보조금으로 불균형이 더욱 커진다는 점 등을 규명했다. 그러나 자료가 1995년의 자료라는 점과, 시계열적 변화를 파악할 수 없다는 점이 한계로 남는다. 임병인·전승훈(2004)은 노동패널을 이용해 연령별 집단의 소득불균형도가 전체 소득불균형도에 얼마나 기여하는지를 지니계수 분해를 통해 분석했는데, 연령집단 간 소득불균형이 전체소득 불균형도 악화에 크게 기여하는 것으로 파악했다.

한편 양극화를 나타내는 지표에 대한 비교분석을 시도한 유경준(2007)은 지니계수, 타일계수, Wolfson지수, 개선된 ER지수 등을 통해 소득불균형도와 양극화정도를 분석하고, 상대적 소득불균형도(지니, 타일계수)와 양극화지수(Wolfson, ER지수)는 그 개념상에 차이가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실제의 추정치에서는 통계학적으로 뚜렷한 차이를 찾기 어렵다고 결론 내린다. 특히 기존 한국의 문헌연구에서 나타나는 외환위기 이후 한국 소득분배구조의 변화를 측정할 때 서로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다는 주장과 소득불균형도에 비해 양극화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화되었다는 기존의 연구결과들이 오류임을 주장한다(유경준, 2007: 33~47).

앞서 강신욱 외(2006)의 연구에서는 ER지수에 대해서 그 개념정의가 명확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분포상의 변화를 정확하게 대표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주장한다. 특히 집단 간 구분의 기준이 모호하고, 계층 간 이동성을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신동균(2007)은 지니계수 및 양극화지수 값에 의존한 결론 유

< 표 1 > 사회적 양극화 분석을 위한 관련 지표

관련 현상	양극화 관련 기존 국내연구에서 분석된 내용	강신욱 외 연구 관련 지표
빈곤 규모	빈곤율	빈곤율
빈곤의 심각성	-	빈곤격차비율
불균형의 심화	지니계수	지니계수
양극단으로의 쏠림	분위별 점유율	분위별 점유율 상·하위분위 내 지니계수
양극단 간 격차	10(5)분위배율	분위수배율/10(5)분위배율
중간층의 위축	Wolfson지수	Wolfson지수 중간층 규모변화
극화 진행	ER(EGR)지수(n=2)	ER(EGR)지수(n=3,4)
계층 간 이동가능성 축소	-	계층 간 이동확률, 빈곤경험확률 및 결정요인
집단 내·집단 간 불균형	-	엔트로피 분해
기타	-	빈곤층의 구성, 중산층의 규모변화, 주거·건강 및 영양, 의료비의 불균형 양상

도과정에서 통계적 결론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한국의 소득분포가 양극화되었다는 통계적인 결론을 도출했다. 또한 방법론적으로는 리와 신(Lee and Shin, 2007)의 연구에서 제안한 수정된 EGR(Esteban, Gradin, and Ray) 지수에 근거해 분석했다. 분석결과,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포 변화는 단순한 소득불균형의 증가라기보다는 양극화로 대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노동시장의 경기변동이 소득분포의 양극화 변화에 단기적으로는 영향을 미치지만, 외환위기 이후 진행되어온 양극화의 장기적 추세는 경기변동과 무관한 것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양극화 진전은 비근로소득에서 연유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부동산 소득의 양극화 심화 기여도가 가장 크게 나타났다(신동균, 2007: 5~28).

이상의 선행연구에서 사회적 양극화를 분석하기 위한 지표와 강신욱 외(2006)의 연구에서 양극화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한 지표를 추출했는데 이는 <표 1>과 같으며, 양극화에서 보다 구체적인 주거부문의 불균형

<표 2> 주거 격차 분석을 위한 관련 지표

구분	지표	의의	측정방법
양적 지표	주택보급률	주택재고의 절대부족 정도	주택수/보통가구×100
	자가점유율	주거안정성	자가거주가구/전체가구×100
	1인당 주거면적	개인 주거소비량, 주거밀도	가구전용면적/가구원수×100
질적 지표	건축경과년수	주택의 물리적 노후도	조사년도-건축년도+1
	3인 이상 단칸방 거주가구 비율	조밀도	3인 이상 단칸방거주가구 /3인 이상 가구×100
	주거만족도	개별가구 만족도	
주거비 부담 지표	PIR	주택지불능력	주택가격/연소득×100
	RIR	임차가구 주거비부담 정도	임대료/월소득×100
	PTI	상환능력	월상환액/월소득×100
	LTV	주택구입의 초기부담비율	대출금액/주택가격×100
주거 안정성 지표	평균거주기간	주거안정성	조사년도-이사년도+1
	강제이동비율	주거안정성	‘주거부담이 비싸서/임대기간이 만료되어서’의 이사 이유를 선택한 가구의 비율
주거 형평성 지표	지니계수	불균형도	$GI = \sum_{i=1}^n (y_i + y_{i+1})(n_{i+1} - n_i)$
	타일지수	불균형 요인분해	$I(Y) = \sum_{i=1}^n P_i \ln(\frac{u}{Y_i})$ $I(Y) = \sum_{i=1}^n w_g I(Y_g) + I(u_1 e_1, \dots, u_g e_g)$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주거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대상계층	최저주거기준을 기준으로 미달가구를 추정

및 격차를 분석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론은 <표 2>와 같이 종합할 수 있다.

이 연구는 선행연구들과 비교해 크게 시계열적 양극화 추세분석이라는 점과 지역적으로 부동산자산 수준의 현격한 차이가 나타나는 지역(도) 별 분석이라는 점, 동시에 소득항목별 기여도를 분석한다는 점에서 차별성을 가진다. 따라서 이 연구는 ‘전국의 양극화 수준 및 추세는 공간적으로

로 다른 양상을 보일 것이라는 점과 소득항목별로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력이 상이할 것이다'라는 가설을 전제로 한다.

이 연구와 마찬가지로 노동패널을 이용해 분석한 한국은행(2006)의 연구에서는 총소득기준으로 양극화 추세를 분석했으나, 소득항목별로 비중만을 비교해 간접적인 영향력을 추정하는 한계를 가진다. 민승규 외(2006), 권일·류상규(2005), 유경준(2007), 강신욱 외(2006), 신동균(2007) 등의 연구에서는 양극화를 전국단위의 수준에서만 파악하고 있다.

강신욱 외(2006)의 연구에서는 Wolfson지수와 ER지수를 비교분석하고 있다. Wolfson지수 추정을 통해 중산층이 위축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가구비중으로 미루어볼 때 축소된 중산층이 빈곤층으로 편입된 비율이 높음을 밝히고 있다. 반면 ER지수의 경우 변수별로, 패러미터 값별로 서로 다른 양상을 나타내면서, 양극화를 이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한다. 이 연구에서는 민승규 외(2006)에서 Wolfson지수와 ER지수의 변화추이가 크게 다르지 않다는 분석결과와, 강신욱 외(2006)의 ER지수에 대한 문제점을 고려해, Wolfson지수를 통해 도별 양극화 변화추이와 소득항목별 영향력 추이를 파악하고자 한다. 분석내용과 관련해, 일반적인 상식 또는 선행연구결과에 비추어본다면, 소득항목별로 비근로소득 또는 금융 및 부동산 등의 자산소득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은 부정적(양극화 심화)일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공적보조금은 양극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는데, 이러한 가설들은 실증분석의 결과에서 지역별로 확인할 것이다.

3. 양극화 분석 자료와 방법

1) 노동 패널

현재 소득과 관련된 분석에 활용하는 자료는 대체로 통계청의 센서스,

< 표 3 > 소득분위별 가구소득

	조사내용
가구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가구원의 인적사항 ◦ 변동 가구원(추가, 분가, 사망) 관련 문항 ◦ 가족관계와 부모와의 경제적 교류 관련 문항 ◦ 주거 관련 문항 ◦ 자녀교육 및 자녀보육 관련 문항 ◦ 가구의 소득 ◦ 가구의 소비 ◦ 가구의 자산과 부채 ◦ 가구의 경제상태 및 가계에 부담을 느끼는 소비항목

도시가계조사, 가구소비 실태조사, 농가경제통계,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 등이다. 그 중에서 노동연구원의 노동패널은 다른 자료와 비교해볼 때, 1998년부터 매년 조사·구축되고 있다는 점과 지역별로 구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다. 즉, 우리나라의 지역별 양극화 추이를 분석해 지역 내, 지역 간 공간적 불균형을 구체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다만, 지역별로 구분해 격차 및 양극화지수를 추정함에 있어 표본수가 감소된다는 단점이 있으나, 현행 지역별 분석을 위해 사용 가능한 유일한 자료이기 때문에 분석의 의의가 있다고 판단되어 이 연구에서의 분석 자료로 활용한다.

한편 신동균(2007)은 유경준(2007)의 ‘노동패널은 반올림오차(rounding error)를 가진 통계자료이므로, 노동패널을 이용한 양극화 연구의 결론은 오류’라는 주장에 대해 반박하는데, 즉 유경준(2007)의 글 어디에도 측정 오차에 대한 논리적·실증적 뒷받침을 찾아볼 수 없으며, 더 나아가 실증적 분석을 통해 그러한 주장이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노동패널은 전국의 도시지역 가구들 중 5,000가구를 대상으로 1년에 1회씩 가구의 특성과 가구원들의 경제활동 및 노동시장이동, 소득활동 및 소비, 교육 및 직업훈련, 사회생활 등에 관해 추적 조사한 자료이며, 일반적으로 매년 4~9월 사이에 면접 및 전화 조사를 실시한다.

1차년(1998년)부터 9차년(2006년)까지 총 9차례에 걸쳐 조사가 실시되

<표 4> 1~9차년 조사 결과 비교

	조사성공가구수	원표본가구수	표본유지율	가구원수
1차(1998)	5,000	5,000	100.0	13,321
2차(1999)	4,509	4,379	87.6	12,042
3차(2000)	4,267	4,045	80.9	11,206
4차(2001)	4,248	3,865	77.3	11,051
5차(2002)	4,298	3,798	76.0	10,966
6차(2003)	4,592	3,862	77.2	11,543
7차(2004)	4,762	3,863	77.3	11,661
8차(2005)	4,850	3,823	76.5	11,580
9차(2006)	5,002	-	76.5	11,756

자료: 한국노동연구원.

었고, 가구용과 개인용으로 구분되며, 가구에 대한 조사내용은 <표 3>과 같다.

한국노동패널의 특징은 가구단위로 1998년 최초 전국의 5,000가구를 대상으로 같은 가구들을 추적 조사해오고 있기 때문에 가구의 소득조사가 항목별로 일관성 있게 조사·구축되어 있다. 가구소득의 자료는 가처분자료, 즉 세후소득 자료이다. 제1차 조사인 1998년에는 전국의 5,000가구, 1만 3,321명의 가구원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9차년도인 2006년에는 5,002가구, 1만 1,756명 가구원을 대상으로 조사가 실시되었다.

노동패널은 원가구를 대상으로 한 추적조사이기 때문에 표본수가 차츰 감소된다는 점이 단점으로 지적된다. 그러나 2001년 이후 줄곧 77%에 이르는 높은 표본유지율을 나타내고 있어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연구에서는 가구단위로 분석했으며, 조사항목은 주거, 소득, 자산과 부채에 관한 사항을 중심으로 분석한다. 가구는 원가구 및 신규가구를 포함한 가구를 대상으로 했다. 신규가구는 원가구의 가구원 중 혼인 및 합가 등으로 분가한 가구 및 15세 이상 가구원을 의미한다. 노동패널에서 사용되는 소득자료는 조사년도 직전 연도의 소득을 의미한다.

한편 노동패널 1차년도(1998년도) 조사자료의 소득은 ‘지난 1년간’의 소득으로 구축되어 있어, 노동패널 2차년도(1999년도) 조사자료의 소득과 상당히 중복된다. 그 때문에 이 연구에서는 2차년도 노동패널부터 9차년도 노동패널을 중심으로 분석하기로 한다.

노동패널은 고용상태와 연계해 소득분배 상태를 동태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표본지역이 도시지역 거주가구로 한정된다. 따라서 이 연구의 분석결과를 해석할 때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해석해야 한다는 한계점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반면 신동균(2007)에 의하면 노동패널은 (1) 가능한 대표성이 좋은 가구 단위의 자료, (2) 추세를 분석할 수 있기 위해서는 가능한 장기간 동안 매년 조사가 이루어진 자료, (3) 표본 및 소득 변수의 성격 면에서 조사 간 일관성이 있다는 장점을 들어 양극화 현상 분석의 연구에 적합한 자료로 판단하고 있다.

가구단위의 소득자료는 가구구성원에 따른 가구소득의 조정을 실시하게 된다(식1 참조). 코스타와 미켈리니(Michele Costa and Claudio Michelini, 1999)에 의하면 가구단위 소득으로 분석하는 경우, 서로 다른 구성원들로 구성된 가구가 동일한 명목소득을 가진 경우 가구원당 경제적 후생의 정도가 다를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따라서 적절한 환산 또는 동등화지수 (equivalence scale)를 이용해 가구소득을 조정하고 가구구성의 효과를 통제하는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다(정윤희·김의준, 2001: 1174에서 재 인용).

가구구성원의 차별적 효과(the composition effects from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household members)를 고려하기 위해 다음 식의 동등화 탄력성 (equivalence elasticity; E)은 0에서 1의 값을 가진다.

$$\text{Adjusted Income} = \text{Income} / \text{household size}^E \dots\dots\dots (1)^3$$

3) Kim & Jeong, Decomposition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 33, No. 2(2003), p.143.

<표 5> 한국노동패널의 소득 분류

소득분류	세부내용
근로소득	근로의 대가, 봉급, 자영업 소득 포함
금융소득	은행 및 금융기관 이자소득, 사채이자수입, 주식 및 채권의 매매차익, 배당금, 기타
부동산소득	월세 등 임대료, 부동산 매매차익, 토지를 도지 준 것, 권리금, 기타
사회보험	국민연금, 특수지역연금, 산재보험, 보훈연금, 실업급여와 같은 사회보험 1회 수급액
보조금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 기타정부보조금, 사회단체보조금, 친척·친지 보조금 등
기타소득	보험금, 퇴직금, 증여 및 상속, 기타

임의의 E값으로 김의준·정윤희(Kim & Jeong, 2003)와 현진권·강석훈(1997)은 0.50을, 앤킨슨 등(Athkinson, Rainwater, and Smeedling, 1995)은 0.54로 설정했고, 이 연구에서도 E값으로 0.50을 설정해 활용했다. 가구원수에 따른 동등화지수는 김의준·정윤희(Kim & Jeong, 2003)의 지수⁴⁾를 사용해 분석을 실시한다(김성제, 2007: 89~91).

노동패널의 가구 총소득은 <표 5>의 분류대로 여섯 가지로 구분되며, 이 연구에서는 총소득, 근로소득, 금융소득, 부동산소득, 공적보조금 별로 구분해 각각의 양극화지수를 산출해 비교한다. 다만 지역별 소득자료 수의 한계로 총소득에서 각각의 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지수를 도출하기로 한다. 한편 공적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중 친척·친지 보조금과 기타보조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2) 분석 방법

극화(Polarization)의 정도를 측정할 수 있도록 개발된 지표로 대표적인 것으로는 Wolfson지수와 ER지수가 있다. Wolfson지수는 본래 양극화(Bi-Polarization)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며, ER지수는 다극화(Multi-Polarization)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된 지표이다. 현재까지 이들 극화

4) 가구원수에 따른 동등화 지수

가구원수	1	2	3	4	5
동등화지수	1.00	0.71	0.58	0.50	0.45

지수는 주로 양극화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되고 있으며, 특히 지역경제 내의 중산층 소멸정도와 집단 간에 존재하는 갈등수준 등을 정량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활용된다.

앞서 강신욱 외(2006)의 연구로 미루어볼 때, ER지수를 통해 양극화 현상을 측정하는 방법은 변수별로 패러미터 값별로 상이한 양상을 나타내기 때문에 양극화를 이해하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지적된다. 따라서 Wolfson지수 추정을 통해 양극화 추세를 분석하는 방법이 ER지수에 의해 추정하는 방법보다 안정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민승규 외(2006), 유경준(2007) 등의 연구방법과 결과를 살펴볼 때, Wolfson지수와 ER지수의 추정결과 및 그 추세가 유사한 것으로 판단되므로, 이 연구에서는 ER지수의 메커니즘만을 살펴보고 실제 분석은 Wolfson지수를 통해 양극화를 파악하기로 한다.

(1) Wolfson지수

분포의 형태에 기초해 산출되는 Wolfson지수는 상대적 지니계수를 산출하는 로렌츠 곡선으로부터 유도된다. Wolfson(1994)은 ‘중산층의 소멸’이라는 개념에서 출발해 중산층을 중위소득 부근의 계층으로 정의하고, 이들 계층이 양극단으로 쏠리는(퍼지는) 정도가 커질수록 양극화가 심화된다고 해석한다.

Wolfson(1994)과 유경준(2007)의 지수 유도과정을 참고해 정리하면,⁵⁾ 다음 식 (2)와 같이 표현된다.

$$W = 4W^* = 2(2(0.5 - L(0.5)) - G)u/m \dots\dots\dots (2)$$

식 (1)에서 L(0.5)은 하위 50% 소득계층의 소득점유율 의미하고, G는 전체지니계수, u는 평균, m은 중간 값을 나타낸다.

5) Wolfson지수의 기하학적 의미 이해를 위해서는 유경준(2007)의 연구를 참조하기 바람.

두 집단 구성원의 소득범위가 겹치지 않으므로 지니계수는 집단 간 지니계수와 집단 내 지니계수로 정확히 분해될 수 있다. 따라서 위 식 (2)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W = 2u/m(GB - GW) \dots\dots\dots (3)$$

GB와 GW는 각각 중간 값에 의해 분리되어 계산된 집단 간 지니계수와 집단 내 지니계수를 의미한다.

집단 간 지니계수는 집단 사이의 이질성을, 집단 내 지니계수는 집단 사이의 동질성을 강조하므로, GB는 이질적인 집단 사이의 소외감을 나타내며, GW는 유사한 개인 사이의 동질성을 나타낸다(유경준, 2007: 16~17).

(2) ER(Esteban-Ray) 지수

ER지수는 행태식에 기초하고 있다. 앞서 논의한 대로 극화(polarization)는 이론상으로 다극화(multi-polarization), 즉 n개의 극점으로 구성된 집단(집합)으로 구분해 극화정도를 추정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다극화를 측정하는 지수, 즉 ER지수의 분석대상 계층이 3개 이상으로 구분되는 경우 지수를 계산하기가 매우 난해하다는 문제가 지적된다. 때문에 대부분의 국내외 문헌에서는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2분화한 지수를 주로 산출하며 이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들에서 극화란 양극화(bi-polarization)를 계산한 수치를 의미하게 된다(유경준, 2007: 21).

ER지수는 지수산정식 자체에서 계층 간 소득격차를 각 계층의 비중으로 가중평균해 계산하는데, 이는 Wolfson지수가 집단 간 및 집단 내 지니계수를 통해 산정되는 것과 동일한 맥락이다. Wolfson지수 산정과정에서 포함되는, 중위소득을 기준으로 한 집단 간 및 집단 내 지니계수는 그 자체 계산과정에서 각 집단의 계층비중과 소득비중을 함께 고려해 가중평균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하다.

ER지수는 개인이 집단 내에서 느끼는 동질감(identification)과 다른 집단으로부터 느끼는 이질감(또는 적대감, 소외감, alienation)⁶⁾의 구조에 놓여 있다고 가정한다. 즉, 각 개인들의 동질감과 이질감으로부터 한 개인인 다른 개인에 대한 유효 적대감(effective antagonism)으로 정의하고 이들의 합(sum)을 통해 극화를 표현할 수 있다고 보고, 극화지수를 유도하는 것이다(Esterban and Ray, 2004: 1740).

$$ER = P^* = K \sum_{i=1}^n \sum_{j=1}^n \pi_i^{1+\alpha} \pi_j^\beta |y_i - y_j| \dots\dots\dots (4)^7)$$

유경준(2007)은 위 식 (4)를 다음과 같이 다시 표현하고 있다.

$$ER = \sum_{i=1}^n \sum_{j=1}^n \pi_i^{1+\alpha} \pi_j |y_i - y_j|, \quad 0 < \alpha \leq 1.6 \dots\dots\dots (5)$$

위 식 (4) 및 식 (5)는 비교적 단순한 형태의 ER지수라고 할 수 있다. 최근 리와 신(Lee and Shin, 2007)과 신동균(2007)의 연구에서 보다 개선된 형태의 EGR(Esteban, Gradin, and Ray) 지수를 새롭게 제안하고 있다. ER지수 역시 어떠한 집단자료를 통해 집단 지니계수를 산정하는 과정에서 각 집단의 동질성함수(π_i^α)를 곱해준 형태이므로, 일반적인 지니계수 계산 과정에서처럼 지수 앞에 1/2를 곱해주어야 한다. 즉, 연속변수로 계산되는 지니계수와 집단자료를 통해 계산되는 지니계수의 차를 지수 산정과정에서 고려함으로써 단순한 형태의 ER지수의 상향 편의를 교정하는 의미이다(신동균, 2007: 7~8).

리와 신(Lee and Shin, 2007) 및 신동균(2007)의 연구에서 제안된 개선된

6) 유경준(2007)은 alienation을 ‘소외감’으로 민승규 외(2006)는 ‘이질감’으로 표현하고 있다.

7) Esterban and Ray(2004)는 β 와 관련해 공리체계에 포함하지 않고 $\beta=0$ 으로 가정을 단순화했다.

지수의 산식은 다음 식 (6)과 같다.

$$R-EGR(\alpha, \beta) = \frac{1}{2\mu} \sum_{i=1}^K \sum_{j=1}^K \pi_i^{1+\alpha} \pi_j \rho_{\theta} |\mu_i - \mu_j| - \beta(G - G_p) \dots\dots\dots (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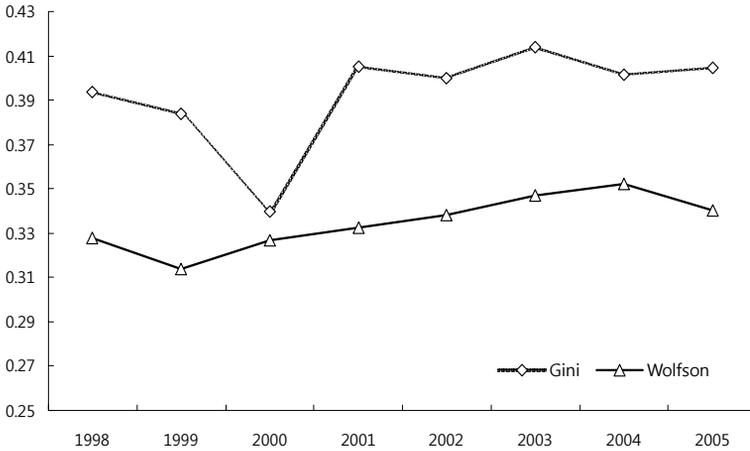
첫 번째 항은 식 (5)의 ER지수를 평균으로 일반화한 형태이며, 두 번째 항은 연속변수인 소득을 집단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수의 상향편의를 교정하기 위해 빼주는 근사에 의한 오차항이며, β 는 오차항의 가중치를 의미한다. μ 는 평균, K 는 집단의 수, π_i 는 집단 i 의 비율, α 는 극화 지수의 값을 집단 지니계수와 구별되게 하는 모수로 동질성 함수에 두는 가중치 역할이며, $\rho_{\theta}(\mu_i - \mu_j)$ 는 집단 i 및 집단 j 의 구성원들이 서로에게 느끼는 이질감이나 적대감을 나타내는 이질성 함수를, G 는 지니계수, G_p 는 집단자료를 이용해 계산한 지니계수를 나타낸다(신동균, 2007: 6~7). 여기에서 임의의 모수 α 의 값에 따라 ER지수의 값과 추세가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문제로 지적된다.

4. 양극화 추세

1) 전국: 총소득 기준

1998년부터 2005년까지 전국의 양극화 추세는 <그림 1>과 같다. 외환위기가 있었던 1998년과 이듬해에 양극화와 소득불균형 정도가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지만, 2000년대 들어서서 모두 지속적으로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다만 가장 최근의 조사자료(제9차 자료)인 2005년 소득의 경우에 양극화 추세가 다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기존 선행연구의 연구결과(제8차 자료까지를 대상으로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최근의 양극화 현상은 과거에 비해 심화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그림 1> 전국 연도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1998~2005)



2004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전국의 양극화 수준은 0.3519로,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소득(10분위)을 이용해 분석한 민승규 외(2006)의 연구에서 같은 해 전국의 Wolfson지수가 0.2801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지니계수와 마찬가지로 통계청의 도시근로자 대상의 『가계소득』 자료가 양극화의 수준을 과소 추정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공간적으로 전국단위에서 분석한 결과로서, 지역별로 양극화 현상이 어떠한지에 대해서는 파악할 수 없다. 그리고 전국단위에서 파악하는 양극화 수준은 그 절대적 기준 설정이 어렵고,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면 국가 간 비교—물론 비교 가능할 정도의 공인된 양극화지수는 아직 없는 실정—를 통해 가능하기도 쉽지 않아 구체적인 해석을 하기가 어렵다. 또한 총소득 기준의 양극화 심화현상이 과연 근로소득에서 연유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소득의 영향인지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이하에서는 지역별로 도 단위로 구분해 전국단위의 양극화 추세와는 어떻게 다른지 분석해보고, 다른 한편으로는 소득항목별로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쳤는지 파악하기로 한다.

< 표 6 > 지역(도)별 양극화 상대적 비교: 총소득 기준

	양극화 심화 ←-----→ 양극화 완화
1998	충남 > 전남 > 강원 > 전북 > 경북 > 경기 > 충북 > 경남
1999	전남 > 전북 > 충북 > 경북 > 경남 > 강원 > 경기 > 충남
2000	충남 > 전남 > 전북 > 충북 > 강원 > 경북 > 경남 > 경기
2001	강원 > 전남 > 전북 > 충남 > 충북 > 경북 > 경남 > 경기
2002	충남 > 전남 > 강원 > 전북 > 충북 > 경북 > 경기 > 경남
2003	전남 > 충남 > 강원 > 전북 > 경북 > 경기 > 충북 > 경남
2004	전남 > 전북 > 경북 > 강원 > 충남 > 경기 > 충북 > 경남
2005	전북 > 전남 > 경북 > 충남 > 강원 > 경기 > 경남 > 충북

2) 도별 양극화 추세: 총소득 기준

전국단위에서 파악한 양극화 증가 추세는 지역별로 세분화할 경우, 대 상 기간 동안 양극화가 심화되거나 개선되는 지역이 다르며, 어떤 지역 은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나타난다. 지역별 총소득을 기준 으로 산출한 Wolfson지수를 비교해보면 경기도와 경상남도가 다른 도지 역과 크게 구분된다. 즉,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줄곧 양극화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그 추세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 반면 전 라남도는 양극화 현상이 매우 두드러지는 것으로 파악된다. 한편 충청북 도의 양극화 수준이 다른 도지역과는 달리 상대적으로 꾸준히 개선되 고 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충청북도의 상대적인 양극화 수준이 개 선되는 직접적인 요인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총소득을 구성하는 하위 소득항목별 양극화 수준을 파악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추측할 수 있다(다음 절에서 구체적으로 살펴보겠다). 직관적으로 ‘수도권의 외연적 확산’에 따른 결과일 수 있다는 가설을 세울 수 있으나, 구체적인 실증이 필요한 과제이다.

각 도별로 양극화 수준의 시계열적 변화양상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양극화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다거나 개선되고 있다고 결론 내리기에는

<표 7> 지역(도)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총소득 기준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경기	0.3145	0.2775	0.2960	0.2911	0.3075	0.3290	0.3413	0.3254
강원	0.3909	0.2982	0.3622	0.6126	0.3912	0.3824	0.3789	0.3301
충북	0.2971	0.3361	0.3901	0.3572	0.3851	0.3275	0.3009	0.2548
충남	0.5778	0.2457	0.5136	0.3893	0.5502	0.4829	0.3773	0.3463
전북	0.3414	0.3644	0.4341	0.4087	0.3889	0.3780	0.4303	0.3924
전남	0.5229	0.4945	0.4357	0.4665	0.4119	0.4904	0.4600	0.3781
경북	0.3185	0.3186	0.3345	0.3472	0.3378	0.3758	0.4111	0.3690
경남	0.2968	0.3157	0.3053	0.3015	0.2707	0.3155	0.2872	0.2909

뚜렷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 1998년부터 2004년까지 경기도는 양극화 지수가 소폭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경상남도는 꾸준히 안정적인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경상북도의 양극화지수가 2003년과 2004년에 두드러지게 증가했으며, 충청남도과 전라남도는 감소하는 추세에 있다. 경상남도를 제외한 모든 도지역에서 2005년 양극화지수가 감소했으며,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및 1999년에 비해 지역별로 양극화 수준의 차이가 매우 작아져 0.4 이하로 수렴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5. 소득항목별 영향력

이 절에서는 총소득의 양극화 수준에 미치는 소득항목별 영향력을 파악하기 위해 근로소득을 제외한 각각의 소득을 총소득에서 제외하면서 관련 지수를 도출하기로 한다. 근로소득의 경우 모든 가구에서 발생하므로 총소득에서 제외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반면, 부동산, 금융, 공적 보조금 등의 소득은 가구별로 편차가 크고 해당 소득이 발생하지 않는 가구들도 많기 때문에 총소득에서 각각의 소득을 제외함으로써 그 영향력을 파악한다. 따라서 근로소득의 양극화지수와 여타 소득의 양극화지

< 표 8 > 경기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314	0.277	0.296	0.291	0.307	0.329	0.341	0.325
근로소득	0.284	0.235	0.283	0.252	0.274	0.294	0.311	0.286
부동산소득제외	0.312	0.277	0.303	0.285	0.303	0.325	0.336	0.334
금융소득제외	0.308	0.278	0.296	0.291	0.309	0.330	0.343	0.330
공적이전제외	0.307	0.272	0.295	0.290	0.304	0.326	0.339	0.325
기타소득제외	0.314	0.272	0.295	0.286	0.304	0.328	0.339	0.324

수를 해석하는 데 유의해야 할 것이다. 한편 공적 보조금이라 함은 보조금 중 친척·친지 보조금과 기타보조금을 제외한 소득을 의미한다.

1) 경기도

총소득의 양극화 수준과 비교해볼 때, 근로소득의 양극화 수준은 훨씬 안정적이다. 총소득과 근로소득의 양극화 수준의 차이는 비근로소득으로 인한 결과이다. 즉, 비근로소득으로 양극화가 한층 더 심화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 총소득에서 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공적이전소득을 각각 제외하면서 추정된 Wolfson지수는 <표 8>과 같다. 우선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은 총소득의 양극화 수준에 연도별로 상이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파악된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2001년부터 2004년까지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금융소득의 경우 1999년 이후 양극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다른 지역과 달리 자산소득 중에서 금융소득이 양극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점이 특징이다.

다른 지역들과 비교해보면, 경기도에서 부동산소득이 양극화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은 크지 않다. 금융소득 역시 다른 지역에서는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경기도와는 다른 결과이다. 공적 보조금의 영향이 양극화를 다소 심화시키는 결과(8개년)가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정부의 소득지원정책의 부작용 또는 역효과라고 해석하기보

<표 9> 강원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390	0.298	0.362	0.612	0.391	0.382	0.378	0.330
근로소득	0.246	0.199	0.262	0.413	0.341	0.310	0.313	0.300
부동산소득제외	0.352	0.305	0.375	0.601	0.344	0.376	0.387	0.325
금융소득제외	0.379	0.261	0.359	0.605	0.359	0.382	0.385	0.322
공적이전제외	0.333	0.373	0.316	0.526	0.405	0.369	0.390	0.348
기타소득제외	0.370	0.263	0.362	0.577	0.386	0.382	0.378	0.331

다는 보조금지급의 왜곡 또는 지원대상의 부적격 가능성 등의 가능성을 추측해볼 수 있다.

2) 강원도

최근 4년 동안 강원도의 전체적인 양극화 추세는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소득항목별로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총소득의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 영향의 크기는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상대적으로 큰 편이다.

공적보조금의 양극화 개선효과 또는 심화효과가 시기별로 크게 달라 일관된 정책효과를 거두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최근 2004년과 2005년에는 공적보조금을 통한 양극화 수준의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이 특징이다. 결국 강원도 지역의 양극화 수준은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의 편중해소를 통해 현저하게 개선될 여지가 크다고 하겠다.

3) 충청북도

충청남도과 마찬가지로 최근 3년 동안 양극화 추세가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으며, 충청남도에 비해 양극화 수준은 훨씬 안정적이고, 2005년을 기준으로 전체 도지역 중에서 상대적인 양극화 수준이 가장 양호하

< 표 10 > 충청북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297	0.336	0.390	0.357	0.385	0.327	0.300	0.254
근로소득	0.364	0.249	0.332	0.325	0.315	0.321	0.321	0.258
부동산소득제외	0.347	0.315	0.365	0.331	0.347	0.336	0.302	0.276
금융소득제외	0.306	0.336	0.370	0.364	0.383	0.319	0.293	0.249
공적이전제외	0.308	0.336	0.370	0.356	0.397	0.348	0.332	0.279
기타소득제외	0.361	0.297	0.380	0.356	0.346	0.325	0.303	0.244

다. 다만, 1998년 및 2004년의 경우 근로소득의 양극화 수준이 총소득의 양극화 수준보다 심화된 것으로 나타나, 고용을 통한 근로소득이 상대적으로 불안정한 것으로 판단된다.

2002년까지 부동산소득은 총소득의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났지만, 2003년 이후 오히려 양극화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분석되었다. 반대로 금융소득은 2002년까지 양극화를 다소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나, 2003년 이후 양극화를 다소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는 2003년 이후 중위소득층 이하에서 발생한 부동산소득이 상당히 많았다는 사실과 이와 반대로 금융소득은 중위소득층 이하에서는 상당히 적었다는 사실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서 주목할 점은 최근 4년 동안 공적보조금으로 양극화가 개선되고 있으며, 그 폭이 확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공적보조를 통한 불균형 해소효과가 가시화되고 있음을 말해준다.

4) 충청남도

충청남도는 충청북도의 비해 상당히 불안정하고 높은 수준의 양극화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경기도와 강원도를 포함한 중부권에서 비교해볼 때도 상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한편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력의 경우 충청

< 표 11 > 충청남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577	0.245	0.513	0.389	0.550	0.482	0.377	0.346
근로소득	0.353	0.357	0.303	0.329	0.364	0.296	0.322	0.326
부동산소득제외	0.422	0.385	0.398	0.382	0.517	0.390	0.396	0.341
금융소득제외	0.446	0.409	0.396	0.373	0.488	0.392	0.403	0.341
공적이전제외	0.448	0.405	0.407	0.419	0.461	0.398	0.425	0.373
기타소득제외	0.428	0.402	0.396	0.383	0.465	0.373	0.405	0.359

< 표 12 > 전라북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341	0.364	0.434	0.408	0.388	0.378	0.430	0.392
근로소득	0.333	0.322	0.369	0.418	0.404	0.343	0.407	0.366
부동산소득제외	0.347	0.374	0.457	0.421	0.401	0.407	0.441	0.391
금융소득제외	0.370	0.354	0.431	0.420	0.385	0.386	0.432	0.399
공적이전제외	0.346	0.338	0.405	0.432	0.396	0.393	0.443	0.436
기타소득제외	0.351	0.359	0.402	0.369	0.392	0.379	0.430	0.392

북도와는 다르게 분석대상 기간 동안(1999년, 2004년 제외) 대체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공적보조를 통한 양극화 영향력은 2004년 및 2005년에 충청남도와 마찬가지로 개선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5) 전라북도

전라북도 총소득의 양극화 정도는 비교적 높은 수준으로 나타난다. 근로소득을 기준으로 할 때 양극화 수준이 도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파악된다. 2001년과 2002년에는 근로소득의 양극화 수준이 총소득의 양극화 수준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다른 지역에 비해 특이한 점은, 부동산소득이 양극화에 긍정적인 영향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그 추세도 전체 기간 동안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

<표 13> 전라남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522	0.494	0.435	0.466	0.411	0.490	0.460	0.378
근로소득	0.436	0.385	0.354	0.381	0.306	0.393	0.434	0.366
부동산소득제외	0.527	0.495	0.430	0.440	0.412	0.479	0.455	0.392
금융소득제외	0.515	0.480	0.428	0.482	0.402	0.497	0.467	0.371
공적이전제외	0.551	0.478	0.456	0.459	0.379	0.487	0.483	0.397
기타소득제외	0.495	0.486	0.416	0.483	0.411	0.461	0.460	0.381

다. 금융소득의 경우 2002년까지는 대체로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었다가 2003년부터는 양극화를 개선시키는 요인으로 나타나고 있다. 공적보조금은 최근 5년 동안 양극화 추세를 꾸준히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그 개선효과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나고 있다.

6) 전라남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전체 도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의 양극화 심화현상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다. <표 13>에서 보듯이 소득항목별 분석에서 부동산소득과 금융소득은 전체 분석대상 기간 동안 특정한 패턴을 보이지 않고 연도별로 각각 다른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전국, 수도권, 비수도권, 도, 광역시 등의 규모가 큰 지역구분에서 나타나는 양극화 추세와 각 도별로 파악한 양극화 추세가 전혀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은 자칫 양극화의 문제를 왜곡할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사실을 반증한다.

이러한 사실은 자산소득뿐만 아니라 근로소득, 공적보조금 등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력이나 방향에서도 지역별 특성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각기 다른 정책적 접근방법을 취해야 함을 말해준다.

<표 14> 경상북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318	0.318	0.334	0.347	0.337	0.375	0.411	0.369
근로소득	0.270	0.317	0.306	0.344	0.315	0.350	0.397	0.356
부동산소득제외	0.322	0.323	0.332	0.342	0.332	0.376	0.412	0.372
금융소득제외	0.322	0.312	0.330	0.348	0.333	0.372	0.404	0.379
공적이전제외	0.315	0.323	0.332	0.355	0.340	0.394	0.450	0.391
기타소득제외	0.315	0.319	0.327	0.338	0.338	0.379	0.405	0.363

7) 경상북도

총소득을 기준으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양극화가 꾸준히 심화되는 추세를 보여준다. 다만 2005년 다른 모든 지역과 마찬가지로 양극화가 급격하게 개선되는 모습을 보인다.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으로서 부동산소득은 2001년부터 2002년까지에 한정되며(그 정도도 미미함), 이외의 기간에는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소득의 경우도 양극화에 뚜렷하게 영향을 주는 요인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공적보조금으로 인한 양극화 추이 개선효과가 최근 5년 동안 지속되며 그 폭도 상당히 커지고 있으므로 공적인 보조금지급정책의 실효성이 확대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8) 경상남도

총소득기준으로 전체 도지역 중에서 경상남도의 양극화 수준이 가장 낮고, 그 추세도 상당히 안정적이다.

소득항목별로 근로소득의 양극화는 계속 심화되고 있지만 과거 2000년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고 그 절대적 수준도 다른 지역과 비교해볼 때

< 표 15 > 경상남도 소득항목별 양극화지수(Wolfson) 추이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총소득	0.296	0.315	0.305	0.301	0.270	0.315	0.287	0.290
근로소득	0.264	0.270	0.288	0.261	0.228	0.278	0.262	0.272
부동산소득제외	0.296	0.307	0.308	0.299	0.265	0.328	0.289	0.295
금융소득제외	0.294	0.320	0.299	0.307	0.267	0.322	0.288	0.291
공적이전제외	0.299	0.312	0.309	0.310	0.260	0.300	0.290	0.297
기타소득제외	0.286	0.306	0.310	0.304	0.269	0.311	0.285	0.293

문제되지 않는 수준이다.

부동산소득과 근로소득이 양극화에 미치는 영향력은 매우 미미해 뚜렷하게 양극화를 심화시키거나 개선시키는 패턴을 나타내지 않고 있다.

6. 결론 및 시사점

이 연구는 사회적 양극화가 지역(도)별로 지난 1998년부터 2005년까지 8년 동안 어떻게 진행되어왔고, 양극화에 미치는 자산소득(부동산 및 금융소득)의 영향력을 지역별로 추정했으며, 특히 정부의 공적보조금이 양극화에는 올바른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를 고찰했다. 우선 각 도별 양극화 추세는 전국단위에서 파악한 양극화 추세와는 사뭇 다른 변화를 나타냈다. 전국단위에서 양극화는 2000년 이후 2004년까지 지속적으로 심화되었으나, 도 단위에서는 추세적으로 심화형(경기, 경북), 개선형(전남, 충남, 충북), 안정형(경남) 등으로 각기 다른 양상이 나타났다. 또한 2005년에는 모든 지역에서 양극화가 상당히 개선되는 경향이 나타났다.

도별 소득항목에 따른 양극화 영향력 분석결과를 통해 전국단위에서 양극화 심화요인으로 파악된 부동산소득은 도별로 추정하는 경우, 시기별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적지 않기 때문에 전 기간 동안 심화요인으로 확증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이는 금융소득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나

<표 16> 도별 소득항목별 양극화 영향력 분석

	경기도		강원도		충청북도		충청남도		전라북도		전라남도		경상북도		경상남도	
	98~05	최근 3년	98~05	최근 3년	98~05	최근 3년	98~05	최근 3년	98~05	최근 3년	98~05	최근 3년	98~05	최근 3년	98~05	최근 3년
부동산 소득	↑	↑	△	△	△	△	↑	△	↓	↓	△	△	△	△	△	△
금융 소득	↓	↓	△	△	△	↑	△	△	△	△	△	△	↑	↑	△	△
공적 보조금	↑	↑	△	△	△	↓	△	△	△	↓	△	△	△	↓	△	△
기타 소득	↑	↑	△	△	↑	↑	↑	△	△	△	△	△	△	△	△	↑
근로 소득	추세	수준	추세	수준	추세	수준	추세	수준	추세	수준	추세	수준	추세	수준	추세	수준
	유사	낮음	유사	낮음	상이	낮음 98~04년 높음	상이	낮음	유사	최근 4년 높음	유사	낮음	상이	낮고 안정	상이	높고 불안정

타난다. 부동산소득의 경우 대체적으로 양극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지만, 충북(최근 3년), 전북(전 기간), 경남·경북(최근 3년)에서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도 했다.

한편 자산소득 중에서 금융소득의 양극화에 대한 영향력은 지역별, 시기별로 다르게 나타난다. 경기도의 경우 금융소득이 양극화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거나, 오히려 양극화를 완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소득계층별로 금융자산의 투자 및 보유가 보편화된 최근의 경향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금융(투자)자산의 경우 다양한 소득계층이 비교적 손쉽게 접근·이용할 수 있다는 점에서 부동산 자산과 비교된다.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조사하는 소비자태도조사결과는 이러한 개연성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게 한다.⁸⁾

총소득의 양극화 수준과 비교해볼 때, 모든 지역에서 대체로 근로소득

8) 삼성경제연구소는 1991년부터 소비자태도조사를 매분기별로 조사하고 있으며, 부동산과 금융자산의 증감을 묻는 항목은 2007년 2/4분기부터 생겼다.

의 양극화 수준은 상당히 낮은 수준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지역에서 시기별로 근로소득의 양극화 수준이 총소득의 양극화 수준보다 높은 경우가 간혹 발견되지만, 정책적 차원의 제어요소로서는 고용에서 비롯되는 근로소득보다는 비근로소득(부동산소득, 금융소득, 공적보조금)이 유효하기 때문에, 양극화 해소 차원의 정책적 수단은 고용정책(노동시장)보다는 비근로소득(부동산 및 금융시장)을 제어하는 정책에 초점을 맞추어야 할 것이다.

공적보조금의 경우 전국단위에서는 양극화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나, 역시 도 단위별로는 각각 다른 양상을 나타냈다. 전북, 충북, 경북에서 공적보조금의 양극화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지속되고 있으며, 강원, 충남, 전남의 경우에는 최근 2년간 개선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다만 경기도와 경남에서는 상대적으로 그 효과가 불분명하다. 따라서 지역별로 공적보조금의 효과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원인에 대한 도별 비교 분석의 정책과제가 필요하다.

소득계층별 순자산증가	2/4		3/4		4/4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	부동산↑	금융↑
1분위(하위 20%)	37.6	55.3	36.6	51.4	26.2	59.5
2분위	41.1	36.6	26.9	53.8	13.5	71.2
3분위	36.4	39.0	27.5	50.7	35.3	41.2
4분위	36.7	55.1	26.3	60.5	23.8	52.4
5분위(상위 20%)	36.0	40.0	41.4	34.5	36.0	52.0

❖ Abstract

On the Measurement of Regional Bi-polarization in Korea

Kim, Sung-Je, Choi, Sang-Hee

In Korea, alongside fast economic growth has come a new challenge: deepening bi-polarization. This paper analyzes the bi-polarization in Korea with respect to income source using KLIP(Korean Labor and Income Panel) data during 1998-2004. Further this paper investigates the reasons behind the increasing regional(8 provinces) bi-polarization with respect to income source(financial income, real estate income, public subsidies). When the Wolfson indexes of income bi-polarization were measured by regions, the levels of bi-polarization are so different by regions. Especially, income of real estate caused negative effect on bi-polarization.

Keywords: Regional bi-polarization, Wolfson index, Income of real estate

참고문헌

- 강신욱 외. 2006. 「사회양극화의 실태와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권일·류상규. 2005. 「인구분포로 본 우리나라 국토불균형」. 《국토계획》, 제40권 2호.
- 김성제. 2007. 「소득유형별 지역불균형 수준의 비교 분석」. 《공간과 사회》, 제27호.
- 김의준. 2003. 「우리나라 지역불균형 문제의 이해와 지방 분산화 정책효과」.
- 대통령지문정책기획위원회. 2006. 「양극화 현상의 원인 진단과 극복방안」.
- 류상영·최인철. 1999. 「중산층의 약화와 정책대응」. 삼성경제연구소.
- 민승규 외.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삼성경제연구소.
- 봉인식. 2006. 「경기도내 지역 간 소득수준별 주거수준격차 현황 및 개선방안」. 경기개발연구원.
- 빈부격차·차별시정위원회. 2005. 「양극화해소와 사회통합」.
- 삼성경제연구소. 2006. 「소득양극화의 현황과 원인」.
- _____. 2007. 「소비자 태도조사」. 2/4분기~4/4분기.
- 성현균·김혜자. 2006. 「지니계수분해법을 이용한 서울대도시권 지방재정의 불균등도 추이분석」. 《국토계획》, 제41권 6호.
- 신관호·신동균. 2007. 「소득분포 양극화의 특성과 경제사회적 영향」. 《한국경제의 분석》, 제13권 1호.
- 신광영. 2006. 「세계화와 사회 양극화」. mimeo.
- 신동균. 2007. 「외환위기 이후 소득분배 양극화의 추이, 원인, 및 정책적 시사점」. 외환위기 이후 10년 전개과정과 과제 학술세미나 논문집. 한국경제학회.
- 유경준. 2007. 「소득불균형도와 양극화」. KDI.
- 윤주현. 2006. 「주거양극화의 현황 및 과제」. 국토연구원.
- 윤주현 외. 2006.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 II」. 국토연구원.
- _____. 2005. 「지역 간·계층 간 주거서비스 격차 완화방안 연구 I」. 국토연구원.
- 이재형. 2004. 「서울시 중산화가능계층 주택수요 실태분석」. 서울대 도시공학과.
- 임병인·전승훈. 2005. 「연령집단별 소득불평등도와 전체불평등도에 대한 기여도 분석」. 제6회 노동패널 학술대회 발표논문. 한국노동연구원.
- 임석희·이용우. 2002. “Social Polarization and Its Spatial Characteristics: the Case of Seoul”. 《한국지역지리학회지》, 제8권 제2호.
- 정윤희·김의준. 2001. 「한국 지역소득격차의 분해」.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추계학술대회 발표논문.
- 한국은행 경기본부. 2006. 「경기지역의 소득양극화 현황 및 시사점」.
- 홍종욱. 2006. 「양극화대책과 경제구조개혁」,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1회 경제정의 포럼.

- Castells, M. 1989. *The Informational City: Economic Restructuring and Urban Development*. Wiley-Blackwell Pub.
- Duclos, J., J. Esterban and D. Ray. 2004. "Polarization: concepts. measurement. estimation." *Econometrica*, Vol. 72.
- Esterban, J. and D. Ray. 1994. "On the Measurement of Polarization." *Econometrica*, Vol. 62.
- Eun-Nan, Kim. 2006. "Information Occupations and the Socioeconomic Environments in U.S. Metropolitan areas." Dissertation of Cornell University.
- Kim, E. J. and Y. H. Jeong. 2003. "Decomposition of Regional Income Inequality in Korea." *The Review of Regional Studies*, Vol. 33, No. 2, p. 143.
- Michele Costa and Claudio Michelini. 1999. "An Analysis of the Distribution of Income and Wealth among Italian Households." *Discussion Paper*, No.99, 11. Massey Univ.
- Wolfson, Michael C. 1997. "Divergent Inequalities: Theory and Empirical Results." *Review of Income and Wealth*, Vol. 43(4).
- _____. 1994. "When Inequalities Diverge." *American Economic Review*, Vol. 84(2).

논문접수일: 2008. 10. 31

게재확정일: 2008. 11. 18